

참여연대이슈리포트

Issue Report

IR-20100608

〈정부의 일자리 대책 모니터 보고서 ①〉

공공기관 청년고용 실태보고서

- 02 요약
- 04 개요
- 06 청년실업 현황과 정부의 대응
- 08 공공기관 청년채용 실태 조사결과
- 14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제언

말로만 청년실업 해결! 정부는 의지 있나?

○ 취지

참여연대는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04년~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채용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정원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행 실태를 분석함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노동부는 집계중이라는 이유로 2009년 자료를 제외한 2004년~2008년 자료만 3월 31일 공개함. 그러나 현재(3.31)까지 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채용현황이 집계되지 않은 것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동법 시행령 규정 위반이라 할 수 있음.

○ 분석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 신규채용, 청년채용 모두 급감

정원대비 신규채용인원,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정부에 비해 급감 (5.2%→1.6%)

2008년 86개 공공기관 중 3% 청년채용 권고사항을 따른 곳 12개(0.8%)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청년채용도 급감함. 즉 참여정부 시절(2004년~2007년)에는 정원대비 5.2%(22,258명)를 신규인력으로 채용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는 1.6%(2,035명)만을 신규채용 하였음. 또한 참여정부 시절엔 평균 3.2%였던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청년 신규채용’ 비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평균 0.8%로 급감함. 그 결과 2004년~2008년 매년 절반이 넘는 수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3% 청년채용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신규 고용 인원 중 청년의 비율도 04년 71.4%에서 08년 51.2%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고용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마저 고용창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매출 1조 이상 10대 공공기관 중 3% 청년채용 기관은 1곳, 4개의 기관은 청년채용 0명

2008년 매출 1조 이상인 10대 공공기관 중 3% 청년 채용 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 곳 뿐이며,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3%채용 권고기준을 넘긴 적이 없는 기관도 3개나 됨.

‘3%청년채용’ 권고 이행 기업에게 준다던 혜택, 말 뿐으로 그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③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감면 및 보조금 제도 미도입’이란 이유로 3% 청년채용 권고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제언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 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정부 스스로 괜찮은 일자리를 줄이면서 민간에게만 고용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사회적 설득력이 떨어짐.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년인턴과 같은 단기대책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권고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3% 채용’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3,716명(전체 정원:123,860명¹⁾)의 청년고용 효과를 낼 수 있음. 이는 2008년 전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채용한 1,042명의 3.6배에 해당하는 인원임. 따라서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청년 3%채용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함.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¹⁾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둘째 3% 청년채용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셋째, 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함.

1) 2008년 기준 86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임. 참고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2008년까지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었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 됨.

취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0만 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세~29세)의 취업자 수는 7만 명 감소하였음. 청년실업률 또한 전체 실업률(3.8%)의 2배 이상 높은 수치(8.6%)를 기록하고 있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을 의미함.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며, 청년실업의 원인을 구직자의 눈높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참여연대는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낮추기 이전에 일자리 창출의 한 주체인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해 보고자함

조사내용 및 방법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원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²⁾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2일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채용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함

○ 정보공개청구 내용

- 2)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출발한 이 법은 2009년 10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명칭이 개정됨. 동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장 5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은 제5조③에서 '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단,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08년까지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 됨.

-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
- 해당 기관의 연도별 채용 인원과 채용인원 중 청년(15세~29세)인원 및 그 비율
- 해당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3%청년채용'기관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지원 여부와 그 내용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노동부는 집계중인 2009년 자료를 제외한 2004년~2008년 자료만을 3월 31일 공개함.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6조 ②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3.31)까지 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현황이 집계되지 않은 것은 시행령 위반이라 할 수 있음

고용지표 회복에도 청년고용 찬바람은 여전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0만 명이 증가한 반면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7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20대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8만6000명 감소하였으며, 20대의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100)은 전년보다 0.2% 떨어진 58.4%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떨어진 유일한 계층으로 나타남. 이는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시장의 찬바람은 여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청년실업률은 2009년 하반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 1월 9.3%로 치솟더니 급기야 2월에는 10%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4월 청년실업률은 8.6%로 2월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년(8.0%)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임.

<표 1> 청년 실업률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
실업률 (%)	3.6	3.7	3.7	3.5	3.2	3.2	3.6	3.8
청년실업률 (%)	8.0	8.3	8.0	7.9	7.2	7.2	8.1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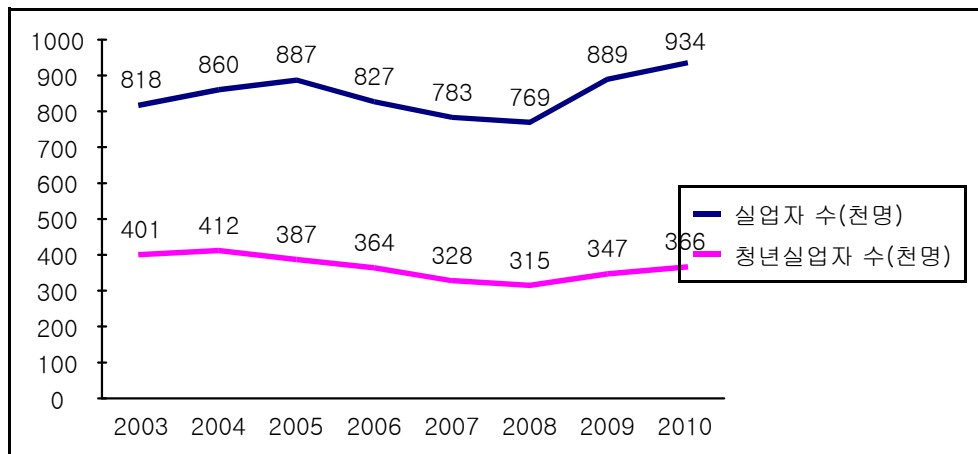
<표 2> 청년 실업률 월별 추이 (2009.1 ~2010.4)

년 월	2009년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청년실업률(%)	8.2	8.7	8.8	8.0	7.6	8.4	8.5	8.2	7.6	7.5	7.7	7.6	9.3	10	9.0	8.6

<표 3> 청년 실업자 수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
실업자 수(천명)	818	860	887	827	783	769	889	934
청년실업자 수(천명)	401	412	387	364	328	315	347	366

<그림 1> 실업자 수 추이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만 늘려

경제위기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려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가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음. 특히 정부는 이렇게 줄어든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단기 저임금 일자리로 대체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2010년 정부의 국가공무원채용계획에 따르면 2,514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임. 이는 작년에 비해 무려 약 1/4(23.1%)나 감소한 것임. 한편 중앙부처의 청년인턴은 작년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6,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4> 공무원 채용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앙공무원	4,223	3,866	4,868	3,267	2,514
전년대비 증감률	-	▽8.5%	▲ 25.9%	▽32.9%	▽23.1%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gosi.go.kr/>

<표5> 2009, 2010 청년인턴 채용 현황

구분	채용기관	2009 채용인원				2010 채용계획
			계약종료	정규직전환	전환률(%)	
청년인턴	중앙정부	7,000	4,069	0	0.0%	6,000
	지자체	13,000	13,000	0	0.0%	7,000
	공공기관	13,000	-	340	2.6%	10,000
	중소기업	32,860	8,685	7050	81.2%	25,000
계 :		65,860	25,754	7,390	-	48,000

출처 : 기획재정부

청년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

- 정부의 청년고용촉진 정책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은 14%에 불과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6>과 같이 2004년 71개의 대상기관 중 30개(42.3%), 2005년 73개 기관 중 33개(45.2%), 2006년 80개 기관 중 34개(42.5%), 2007년 84개 기관 중 32개(38.1%), 2008년 86개 기관 중 12개(14.0%)만이 정원 대비 3% 이상 청년채용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 2004년~2008년 사이 대상기관 중 3% 이상 청년채용 권고를 수용한 기관이 50%가 넘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표7>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현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력이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음. 참여정부 시절(2004년~2007년)에는 평균 정원대비 5.2%(22,258명)를 신규인력으로 채용하였으나 이명박 정부(2008년) 들어서는 1.6%(2,035명)로 신규채용 자체를 줄였음. 또한 참여정부시절 4년 평균 3.2%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신규채용 비율도 이명박 정부 들어선 평균 0.8%로 급감하였고, 대상 기관 중 '3% 청년채용' 권고를 받아들인 기관의 비율도 참여정부시절 42%(2004년: 71개 기관 중 30개, 2005년: 73개 기관 중 33개, 2006년 80개 기관 중 34개, 2007년 84개 기관 중 32개)에서 14%(86개 기관 중 12개)로 줄었음.

특히 <표-12>에서 알 수 있듯 2008년에는 신규채용자 중 청년이 1명도 안 되는 기관이 무려 36곳(대상기관의 4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법의 '청년미취업자 3% 채용' 권고 조항이 유명무실함을 알 수 있음. 이는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008년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청년 미취업자의 3% 채용'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총 3,716명(전체 정원:123,860명)의 청년고용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는 2008년 전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채용한 1,042명의 3.6배에 해당함.

<표 6> 공공기관의 '3% 청년고용' 이행·미달 현황 (04~08년)

구 분	대상기관 (A=B+C)	3%이상 채용기관 (B)		미달기관 (C)
			3%채용권고 달성률 (B/A×100)	
2004년	71	30	42.3%	41
2005년	73	33	45.2%	40
2006년	80	34	42.5%	46
2007년	84	32	38.1%	52
2008년	86	12	14.0%	74

<표 7>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그 중 청년고용 현황 (04~08년)

구 분	정원 (A)	전체 신규채용자 수		청년채용 비율 (B/A)
			청년 채용자 수 (B)	
2004년	77,183	4,746	3,388	4.4
2005년	111,301	6,819	4,258	3.8
2006년	117,705	4,042	2,557	2.2
2007년	121,770	6,651	3,541	2.9
2008년	123,860	2,035	1,042	0.8

단, 대상기관 중 연구원의 경우에는 박사 등의 전문 인력 채용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15세~29세 이하)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2008년에는 18개³⁾의 연구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신규채용 하였지만, 청년고용 실적은 3%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높은 매출에도 고용에는 인색

- 2008년 기준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 중, 3%이상 청년 채용 기업은 1개 뿐

<표 8> 2008년 기준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10개 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의 3%이상 청년 채용 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남. 2008년 한국석유공사는 신규인력으로 109명을 채용하였고 이중 74명이 청년임. 이는 정원의 6.19%에 해당하는 것임.

반면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은 2008년도에 청년고용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3개 공공기관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3%채용 권고기준을 넘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 노동시장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 이 때, 누구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더욱이 매출액이 높은 공공기관 마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표 8> 2008년 기준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현황

순위	회사명	2008년 매출(백만원)	정원(A)	2008년 신규 채용 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중 청년 (B)	비율(B/A)
1	한국전력공사	31,522,383	21,734	470	388	1.79%
2	한국토지공사	9,009,223	2,982	4	1	0.03%
3	대한주택공사	7,869,004	4,385	0	0	0.00%
4	한국철도공사	3,631,442	32,092	17	6	0.02%
5	한국도로공사	3,261,098	4,559	0	0	0.00%
6	한국농어촌공사	2,636,050	5,912	7	1	0.02%
7	한국수자원공사	2,044,533	4,249	147	81	1.91%
8	한국석유공사	1,747,480	1,195	109	74	6.19%
9	예금보험공사	1,486,158	614	0	0	0.00%
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459,617	130	0	0	0.00%

<표 9> 2008년 기준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연도 별 청년고용 현황

순위	회사명	2004년 채용실적		2005년 채용실적		2006년 채용실적		2007년 채용실적		2008년 채용실적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1	한국전력공사	1,065	5.19%	381	1.83%	380	1.82%	742	3.45%	388	1.79%
2	한국토지공사	178	8.15%	163	6.72%	217	8.11%	113	3.91%	1	0.03%
3	대한주택공사	185	5.41%	239	6.22%	237	5.58%	160	3.77%	0	0.00%
4	한국철도공사	-	-	1,920	6.10%	117	0.37%	1,075	3.35%	6	0.02%
5	한국도로공사	335	7.71%	127	2.85%	75	1.66%	116	2.54%	0	0.00%
6	한국농어촌공사	187	3.16%	1	0.02%	85	1.44%	121	2.05%	1	0.02%
7	한국수자원공사	202	5.50%	173	4.60%	73	1.90%	145	3.41%	81	1.91%
8	한국석유공사	65	7.04%	53	5.21%	84	7.61%	2	0.17%	74	6.19%
9	예금보험공사	16	4.34%	22	5.79%	16	4.10%	17	4.17%	0	0.00%
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기반공사(04,05) → 한국농촌공사(06,07) → 한국농어촌공사(08)

말로만 청년실업해결, 의지 없는 정부

- '3%청년 채용 이행 기업', 지원 실적 전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시장이 위축되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청년채용에 힘쓴 공공기관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③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조세 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청년채용현황과 함께 '3% 청년채용 기관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지원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노동부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제도 미 도입'이라고 회신해왔음. '제도 미도입'으로 인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3% 이상 청년채용을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고려한 것임. 대신에 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 청년 채용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따라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제도' 미 도입이란 이유로 이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더욱이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부처가 관련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음.

<표10>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2006년)

■ 3%채용 달성기관

순 번	회사명	2006년 채용실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
			전체	청년 (B)	
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3	15	10	23.26%
2	광해방치사업단	176	64	27	15.34%
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5	18	9	13.85%
4	산업기술시험원	309	41	38	12.30%
5	한국학술진흥재단	148	42	15	10.14%
6	한국노동교육원	73	8	7	9.59%
7	한국수출보험공사	421	44	39	9.26%
8	한국토지공사	2,677	253	217	8.11%
9	한국석유공사	1,104	113	84	7.61%
10	한국소비자보호원	267	27	20	7.49%
11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8	4	2	7.14%
12	국립공원관리공단	921	132	64	6.95%
13	한국산업단지공단	423	27	26	6.15%
1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977	79	58	5.94%
15	환경관리공단	966	123	57	5.90%
16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137	27	8	5.84%
17	에너지관리공단	464	31	27	5.82%
18	근로복지공단	3,457	256	196	5.67%
19	대한주택공사	4,246	295	237	5.58%
2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42	61	35	5.45%
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7	22	7	5.11%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8	9	4	4.55%
23	신제의료관리원	1,994	119	90	4.51%
24	한국주택금융공사	382	34	17	4.45%
25	KOTRA	744	64	31	4.17%
26	예금보험공사	390	19	16	4.10%
27	한국식품연구원	164	20	6	3.66%
28	한국산업안전공단	1,319	74	47	3.56%
2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45	30	5	3.45%
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39	58	22	3.44%
31	한국환경자원공사	1,067	44	36	3.37%
32	한국한의학연구원	90	26	3	3.33%
33	한국관광공사	765	35	25	3.27%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7	25	11	3.26%

■ 3%채용 미달기관

순 번	회사명	2006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
			전체	청년 (B)	
35	한국전기연구원	327	24	9	2.75%
36	농수산물유통공사	580	20	15	2.59%
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7	21	8	2.31%
38	한국조폐공사	1,648	43	37	2.25%
3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81	23	13	2.24%
40	한국전기안전공사	2,819	86	62	2.20%
41	한국해양연구원	411	13	9	2.19%
4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9	11	3	2.01%
4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0	16	5	1.92%
44	교통안전공단	1,145	58	22	1.92%
45	한국수자원공사	3,837	110	73	1.90%
46	한국전력공사	20,898	404	380	1.82%
47	한국디자인진흥원	110	3	2	1.82%
4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02	25	7	1.74%
49	한국도로공사	4,516	94	75	1.66%
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101	32	1.60%
5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75	24	6	1.60%
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2	19	6	1.57%
53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39	23	1.49%
5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8	1	1	1.47%
55	한국농촌공사	5,912	100	85	1.44%
56	신용보증기금	2,271	35	30	1.32%
57	한국기계연구원	484	32	6	1.24%
5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1	22	2	1.10%
5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99	9	1	1.01%
60	광주과학기술원	228	14	2	0.88%
61	한국과학재단	149	5	1	0.67%
62	대한방업진흥공사	345	9	2	0.58%
6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74	4	1	0.57%
64	한국산업인력공단	1,091	29	6	0.55%
65	대한석탄공사	2,391	66	13	0.54%
66	한국원자력연구소	1,132	60	6	0.53%
6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4	8	1	0.49%
68	한국철도공사	31,480	162	117	0.37%
69	기술보증기금	1,252	1	0	0.00%
70	요업기술원	100	8	0	0.00%
7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30	0	0	0.00%
7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93	0	0	0.00%
7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1	0	0	0.00%
7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8	6	0	0.00%
75	한국천문연구원	120	7	0	0.00%
7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94	22	0	0.00%
7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74	41	0	0.00%
78	한국화학연구원	309	12	0	0.00%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5	16	0	0.00%
80	신문발전위원회	5	0	0	0.00%

<표11>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2007년)

■ 3%채용 달성기관

순 번	회사명	2007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
			전체	청년 (B)	
1	한국민간공단	1,043	171	131	12.56%
2	한국주택금융공사	421	58	42	9.98%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65	41	14	8.48%
4	한국노동교육원	88	20	7	7.95%
5	한국시설안전공단	193	21	14	7.25%
6	한국과학기술진흥원	154	26	10	6.49%
7	한국고용정보원	198	56	12	6.06%
8	한국산업안전공단	452	33	27	5.97%
9	에너지안전공단	475	29	26	5.47%
10	영호진흥위원회	110	7	6	5.45%
11	대한방산업공사	393	32	20	5.09%
12	한국교육과학정보원	139	13	7	5.04%
13	한국자연진흥원	110	8	5	4.55%
14	한국한의학연구원	111	28	5	4.50%
15	한국환경정책연구소	68	9	3	4.41%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5	46	29	4.36%
17	한국수출입은행	436	21	19	4.36%
18	예금보험공사	408	18	17	4.17%
19	KOTRA	709	50	29	4.09%
20	한국토지공사	2,882	130	113	3.91%
21	대한주택공사	4,246	195	160	3.77%
2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65	40	24	3.66%
23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5	5	2	3.64%
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74	102	24	3.56%
25	한국환경자원공사	1,111	85	39	3.51%
26	산재의료관리원	2,058	192	72	3.50%
27	한국전력공사	21,654	1,159	742	3.43%
28	한국수자원공사	4,249	238	145	3.41%
29	도로교통안전공단	984	51	33	3.35%
30	한국철도공사	32,082	2,257	1,075	3.35%
31	한국전기안전공사	2,876	111	96	3.34%
32	기술보증기금	1,252	81	41	3.27%

■ 3%채용 미달기관

순 번	회사명	2007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
			전체	청년 (B)	
33	산업기술시험원	340	20	9	2.65%
34	한국조폐공사	1,649	68	43	2.61%
35	한국도로공사	4,559	147	116	2.54%
36	한국산업안전공단	1,055	43	26	2.46%
37	한국소비자원	268	8	6	2.24%
3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9	21	3	2.16%
39	한국농촌공사	5,912	211	121	2.05%
40	국립공원관리공단	921	46	18	1.95%
41	한국수목연구원	172	11	3	1.74%
42	광주과학기술원	238	25	4	1.68%
4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0	23	6	1.67%
4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29	4	2	1.55%
45	한국천문연구원	131	16	2	1.53%
4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6	3	1	1.52%
4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9	16	4	1.49%
48	한국전자연구원	339	16	5	1.47%
49	한국해양연구원	417	16	6	1.44%
50	신용보증기금	2,281	32	31	1.36%
51	한국생물자원연구원	443	81	6	1.35%
52	한국과학기술재단	153	4	2	1.31%
5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0	20	5	1.19%
54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55	18	1.17%
55	한국과학기술원	802	77	9	1.12%
56	한국기계연구원	290	13	3	1.03%
57	광해발치사업단	194	5	2	1.03%
58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7	11	2	1.02%
59	대한석탄공사	2,391	74	20	0.84%
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40	27	16	0.82%
61	요업시험연구원	125	20	1	0.80%
62	한국산업안전공단	1,376	24	11	0.80%
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8	16	3	0.77%
6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38	2	1	0.72%
65	교통안전공단	1,145	16	8	0.70%
66	근로복지공단	3,456	41	23	0.67%
67	한국화학연구원	321	20	2	0.62%
68	한국원자력연구원	1,139	23	7	0.61%
6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9	13	2	0.51%
7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24	9	1	0.31%
7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03	12	1	0.25%
72	한국석유공사	1,195	2	2	0.17%
73	한국관광공사	765	7	1	0.13%
74	한국기술진흥재단	148	0	0	0.00%
7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0	0	0	0.00%
7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0	0	0	0.00%
77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331	3	0	0.00%
78	농수산유통공사	605	4	0	0.00%
79	정보통신안전진흥원	174	0	0	0.00%
8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9	9	0	0.00%
81	한국산업기술연구원	130	0	0	0.00%
82	신문발전위원회	5	0	0	0.00%
83	한국산업기술재단	94	1	0	0.00%
84	대한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44	3	0	0.00%

<표 12>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2008년)

■ 3%채용 달성기관

순 번	회사명	2008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
			전체	청년 (B)	
1	신문발전위원회	5	1	1	20.00%
2	한국저작권위원회	110	12	12	10.91%
3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1,042	141	86	8.25%
4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8	2	2	7.14%
5	한국석유공사	1,195	109	74	6.19%
6	한국산업안전공단	402	22	20	4.98%
7	한국광해관리공단	190	19	9	4.74%
8	한국학술진흥재단	148	9	7	4.73%
9	한국산재의료원	2,058	124	91	4.42%
10	한국산업안전공단	1,158	83	50	4.32%
11	한국소비자원	274	23	10	3.65%
12	KOTRA	640	25	19	2.97%

■ 3%채용 미달기관

순 번	회사명	2008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
			전체	청년 (B)	
13	한국수출입은행	508	16	12	2.36%
14	환경관리공단	1,086	44	25	2.35%
15	국립공원관리공단	1,184	253	26	2.20%
16	한국수자원공사	4,249	147	81	1.91%
17	한국개발연구원	319	19	6	1.88%
18	한국전력공사	21,734	470	388	1.79%
19	한국부동산정보진흥원	55	5	1	1.82%
20	한국교육진흥원	177	23	3	1.69%
21	한국정보통신진흥원	129	2	2	1.56%
22	한국환경정책연구소	127	15	2	1.57%
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1	24	10	1.51%
2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15	40	12	1.47%
25	한국해양연구원	438	34	6	1.37%
2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97	18	5	1.26%
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	5	4	1.18%
2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19	7	5	1.19%
2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72	47	12	1.02%
30	한국고용정보원	227	15	2	0.88%
31	한국조폐공사	1,649	14	13	0.79%
32	한국건설연구원	134	5	1	0.75%
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21	13	0.65%
34	한국보안기술진흥원	159	6	1	0.63%
35	한국광물자원연구원	691	6	4	0.58%
36	한국광물자원공사	393	3	2	0.51%
37	한국산업안전공단	207	2	1	0.48%
38	한국식품연구원	184	2	1	0.54%
39	한국환경자원공사	1,112	33	5	0.45%
4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78	1	1	0.36%
41	광주과학기술원	253	15	1	0.40%
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66	18	1	0.21%
43	대한석탄공사	2,007	26	2	0.10%
44	한국철도기술공단	1,545	1	1	0.06%
45	교통안전공단	1,145	11	1	0.09%
46	근로복지공단	3,542	24	2	0.06%
47	한국전자통신공사	2,876	1	1	0.03%
48	한국토지공사	2,982	4	1	0.03%
49	한국철도공사	32,032	17	6	0.02%
50	한국광업공사	5,912	7	1	0.02%
51	한국도로공사	4,559	0	0	0.00%
52	대한주택공사	4,385	0	0	0.00%
53	농수산물유통공사	605	0	0	0.00%
54	한국관광공사	765	1	0	0.00%
55	신용보증기금	2,282	0	0	0.00%
56	기술진흥보증기금	1,252	0	0	0.00%
57	예금보험공사	614	0	0	0.00%
58	한국주택금융공사	448	0	0	0.00%
59	에너지관리공단	450	0	0	0.00%
60	오염시정비기술원	104	5	0	0.00%
6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6	0	0	0.00%
62	한국산업기술재단	94	0	0	0.00%
63	한국정보통신진흥원	209	0	0	0.00%
6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65	0	0	0.00%
6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37	0	0	0.00%
66	장학통신연구진흥원	214	0	0	0.00%
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76	1	0	0.00%
68	한국경제인고용촉진공단	665	0	0	0.00%
69	한국노동교육원	97	0	0	0.00%
70	한국과학기술원	155	1	0	0.00%
7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84	0	0	0.00%
72	대한전자기술특수연구원	49	2	0	0.00%
7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8	0	0	0.00%
74	양호진흥위원회	110	0	0	0.00%
75	도로교통공단	998	12	0	0.00%
7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1	9	0	0.00%
7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44	12	0	0.00%
7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40	0	0	0.00%
7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17	2	0	0.00%
8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75	1	0	0.00%
8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80	8	0	0.00%
8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14	0	0	0.00%
83	대구광역시기술연구원	80	6	0	0.00%
8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2	0	0	0.00%
8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4	4	0	0.00%
8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0	0	0	0.00%

IV.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제언

일자리·고용창출은 올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떠올랐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최근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임. 정부는 각종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자리 대책은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참여연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04년~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그 결과는 특별법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함. 특히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에 대단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미취업 청년 3% 채용’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해당기관에서 외면당하고, 그나마 권고사항을 지킨 기관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드러남.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 3%채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청년고용특별법 2장 5조 ③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을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함.

둘째, 지금과 같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향에서는 **3%권고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민간부분에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해야 함.

셋째, 공공기관에게만 적용하던 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함**. 3%의무고용을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했을 시, 2008년 기준으로 연 간 약 **6만 5천여 명⁴⁾**의 청년 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로 2008년 1,000대 기업에서 만들어 낸 일자리는 7만 3천여 개⁵⁾임.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정책으로

4) 2010 KLI노동통계 45p, <표II-33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16,288천명(총 종사자 수)×13.4%(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구성 중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비율)×3%=6만5478명

5) 한겨레21 제786호(2009.11.20), ‘대기업, 일자리 창출 제 몫 못했다’ : 한겨레21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천대 기업의 상시 노동자(2003~2008년)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새로 만든 일자리는 7만2875개였다.

대표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은 고용증대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만 확대시켰음. 그러나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민간에게만 고용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노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턴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나 말로만 청년실업 해결을 외칠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채용실적부터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 강화하여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Labor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060800 <정부의 일자리 대책 모니터 ①> 공공기관 청년고용 실태보고서

발 간 일 | 2010. 06. 08 (총 17 쪽)

공동대표 | 임종대 · 정현백 · 청화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천웅소 간사)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